금융지주사 '셀프 연임' 어려워진다
임추위·주주총회 문턱 단계적 상승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연임 횟수별로 의결 요건 차등
임추위 독립성·검증 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수술을 본격화한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3연임 금지법'과 달리 연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연임 횟수별로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연임의 문턱을 높인다. 금융지주사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하되, '이유 없는 연임'은 어렵게 만들어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일부 여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 정부안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이 논의되는 배경으로는 금융지주사의 '셀프 연임' 논란이 꼽힌다.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사유화해 연임을 이어가는 '셀프 연임'이 관행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금융지주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놓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3연임 도전 시 '75% 찬성' 문턱**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직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및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회장 후보 추천 시 연임 여부와 관계 없이 출석 의결권의 과반을 확보해야 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첫 연임은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를, 3연임은 4분의 3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동일인 보유 제한을 고려한다면, 지배주주는 물론 소수주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야만 3연임이 가능해지도록 연임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당초 국회 일각에서는 법으로 대표이사의 연임을 최대 1회(총 6년)로 제한하고, 3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발의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법적 원천 금지가 금융회사의 경영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해, '성과 없는 연임'을 불가능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 **승계과정 투명성 강화**

이번 개선안은 승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직 회장의 영향력도 제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인 사외이사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 후보군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밀실 만남'을 제한해, 현직 CEO가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독립이사제를 통한 임추위의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전(全)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모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임추위의 검증 책임도 강화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경영승계 관련 주총 소집 시에는 임추위 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지정하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도 부과한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초 출범했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우선 여당과 당정협의에서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포스코이앤씨, 3분기 흑자전환 성공

전년동기대비 매출 증가·수익성 개선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3분기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전날 발표한 포스코이앤씨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7630억원, 영업이익은 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30억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080억원보다 3550억원(25.2%) 증가했다. 전분기 매출 1조7690억원과 비교하면 60억원 감소했다.

영업손익은 지난해 3분기 195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분기 영업이익 440억원보다는 40억원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순손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186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전분기 순이익 310억원보다는 줄었다.

포스코홀딩스는 "혹서기 작업일수 감소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1조4000억원 규모의 동탄 주상복합을 비롯해 광명하안 재건축, 분당 한솔6단지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3조8000억원을 확보했다.

플랜트 분야는 그룹사 공정 촉진과 폴란드 소각로 지체상금 감면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익이 개선됐다. 고창 해상풍력과 그룹사 물량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일감도 수주했다.

/이현진 기자 lhj@

국토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편

맞춤형 입지 추천·스마트폰 확인

앞으로 공장 지을 땅을 찾기가 쉬워진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후보지의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부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더하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후보지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3차원 공간정보 위에서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건폐율·용적률을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으로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고도화됐다.

기존에 입지를 단순 진단했다면 앞으로는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입지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업종과 원하는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세부 주소까지 한 번에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사전진단은 PC로만 가능했다.

서비스는 4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지오(Geo) 페스타(Festa)'에서 체험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GTX-A, 내년 상반기 삼성역 구간 무정차 전망

국토부, 구간 기둥 보강방안 2개 압축
김태병 철도국장 "연내 최적대안 결정"



GTX-A 노선도. /메트로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기둥의 보강 또는 재시공 방안을 연내 결정한다. 보강 방안이 채택되면 GTX-A 열차는 내년 상반기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기둥의 시공 오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보강 방안 12개 후보를 2개로 좁혔다고 3일 밝혔다.

하나는 철근을 배치하고 고강도 모르타르(시멘트에 모래와 물을 섞어 만든 건축 재료)를 채워 기둥 단면을 넓히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고강도 모르타르로 기둥 단면을 넓히고 강판으로 보강하는 '합성보강' 방식이다.

학회는 철근 누락 규모가 커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형시험을 통해 보강재가 빈틈을 충분히 채우는지 확인하고 있다.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내진 성능도 검토 중이다.

기둥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하는 방안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가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GTX-A 무정차 통과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안전성과 시공 여건, 공사기간을 고려해 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구체적 일정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연내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우리은행, 'Supply-One 보증' 출시

中企 상거래 데이터 활용 맞춤형 대출

우리은행과 신보가 중소기업의 상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대출을 공급한다.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0월 체결한 '상생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Supply-One 보증'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Supply-One 보증'은 우리은행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내 '원비즈 e-MP' 서비스에 등록된 구매기업의 발주정보를 신보의 보증심사 시스템과 연계해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증 신청은 우리은행 '원비즈 e-MP'와 신보의 'On-Biz'를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해 편의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구매시스템과 연동되는 '원비즈 e-MP'의 발주정보를 활용해 우리은행이 발주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공하면 신보가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며, 납품 전 필요한 생산자금도 판매기업에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신보는 이번 상품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이용 기업 가운데 구매기업이 추천한 판매 중소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구매기업과의 연간 거래금액의 2분의 1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제공된다. 또한 한도 내에서 개별 발주계약 금액의 80% 이내에서 건별로 보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신보는 보증비율 100% 적용과 보증료율 0.4%포인트(p)의 차감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상습체불건설업체, 공공기관 하도급 제동

국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가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을 맡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복적인 대금 체불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던 제재를 강화해 영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실질적인 영업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상습적인 체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